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에 국민 기술 1300여건 제안

등록 2020-08-21 오전 6:00:00

수정 2020-08-21 오전 6:00:00

박민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전략 품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국민 수요 조사'에 1300여건의 기술 제안이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집중육성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개발할 수 있게 연간 1500억원의 기술개

발 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지정 시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지원 효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방식의 '온라인 설문'과 '재밍'을 시범 도입했다.

이번 '온라인 수요 조사'에는 일반 국민은 511건의 기술을 제안했다. 온라인 자유 토론 시스템인 '재밍'에는 625명이 참여해 815건의 기술 제안과 7370건의 토의가 이뤄졌다. 기술 제안만 총 1326건이 접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보안기술, 자율주행 로봇 등 산업 현장에 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치매·독거 노인을 위한 지원기술, 지능형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질병 진단 플랫폼 기술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생명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국민 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을 선정하고 기술성, 시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2021년~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수 중기부 기술정책과장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기술수요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반영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며 "올해 시범 도입한 국민 참여방식의 정책 수립에 일반 국민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정책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분야의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